

주식전략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분석의 기본 가정

- 통상적으로 중간선거 이후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계절적 패턴은 존재
- 1)미국 통상정책의 대중 견제 기조 유지 여부, 2)시장금리 안정화 시기가 주요 변수

주식전략 이상연

T.02)2004-9045

lee.sang-yeon@shinyoung.com

중간선거와 자산시장의 공통점: 물가 걱정이 1순위

S&P500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섬에 따라 일각에서는 11월 3일 예정된 중간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의식해 증시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가 술술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증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 보다는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견힌 뒤에 나타나는 반등의 힘이다. 더불어 인플레이션과 재정건전성 우려에 쉽사리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중장기물 금리의 안정화 여부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간선거가 치뤄지는 해는 대통령 집권 4년 사이클 가운데 증시가 가장 부진한 해로 연중 최대 낙폭 역시 이때 가장 깊게 나타난다. 다만 그 저점은 대체로 선거를 약 6주 앞둔 시점(평균 46일 전, 9월 전후)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 저점을 지나 선거 후 6개월까지 S&P500은 평균 +22.7% 반등했고, 24번 중 23번(96%)이 상승으로 마감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증시가 흔들리지만 이후 불확실성이 견히면서 반등한다'는 통념이 마냥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셈이다.

다만 인플레이션과 재정건전성 우려가 중간선거를 넘어 자산시장 전반의 화두로 변지며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중장기물 금리가 하반기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증시의 추세 전환 신호로 읽을 필요는 없다. 물가에 민감한 트럼프 정부의 유가 관리, 8월 말 잭슨홀에서의 위시 의장 발언, 그리고 중간선거 특유의 계절성이 맞물린다면 지금의 금리 부담은 되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가 봐야 할 것은 사실 선거보다 금리

이번 미국 중간선거 자체는 한국 증시의 방향을 가르는 결정적 이벤트는 아니겠으나 그 결과가 규정할 이후의 정책 및 금리 환경에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첫째, 대중 견제 중심의 통상정책 기조가 유지되며 한국이 '수혜국'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다. 둘째,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가 실제로 진전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장기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다.

중간선거와 자산시장의 공통점: 인플레이션 걱정이 1순위

중간선거와 증시의 역사적 패턴

4년 임기 중간에 치르는
연방의회 선거
= 정권 중간평가

S&P500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1월 3일 예정된 중간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의식해 증시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가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증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 보다는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겹친 뒤에 나타나는 반동의 힘이다. 더불어 인플레이션과 재정건전성 우려에 쉽사리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중장기물 금리의 안정화 여부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는 대통령 4년 임기의 한가운데인 2년차에 치러지는 미국의 연방의회 선거를 의미한다. 하원 전체(435석)와 상원 전체(100석)의 약 1/3을 선출하는데 시기상 사실상 집권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기능하기 때문에 '중간선거'으로 불린다. 참고로 하원은 임기가 2년, 상원은 임기가 6년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양원제이고 특히 상원 의석이 인구와 무관하게 주당 2석으로 배분되며 임기가 엇갈리기 때문에 대통령의 소속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분점정부"가 제도적으로 자주 발생한다. 한국의 여소야대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대통령의 정당은
패배 확률이 높아
새로운 이슈는 아님

1930년 이후 24번의 중간선거에서 당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22번 하원 의석을 잃었다. 특히 재선 대통령의 두 번째 중간선거(이른바 6년차 징크스: 1938년, 1958년, 1986년, 2006년, 2014년)에서 참패 폭이 컸다. 예외는 탄핵 역풍의 1998년과 9·11 직후의 2002년뿐이다. 그 결과 24번 중 16번이 '분점정부'로 귀결됐다.

2026년 구도:
민주당의 하원 탈환은
베이스 시나리오,
관건은 상원의 다수당

이번 중간선거의 전망도 역사적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 Polymarket에 반영된 2026년 중간선거 예상 확률을 살펴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민주당의 하원 장악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 스윙(상·하원 동시 석권)' 46%와 '공화당 상원 유지 및 민주당 하원 탈환' 41%를 합하면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확률은 약 87%에 이른다. 반면 공화당이 하원을 지켜내는 경우('공화당 스윙' 13%와 '민주당 상원 탈환 및 공화당 하원 유지' 약 1%)는 14%에 그친다. 결국 시장은 하원 다수당은 바뀔다라는 큰 그림을 이미 반영한 채 최근에는 상원의 향방에서도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 쪽으로 조금씩 무게를 옮기고 있는 셈이다.

사실 자산시장의 관점에서 이 구도가 나쁘지만은 않다. 결과의 방향성이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는 것은 곧 선거 당일 시장을 흔들 서프라이즈의 여지가 그만큼 좁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남은 핵심 변수는 사실상 상원의 다수당이 어디인지, 즉 민주당의 스윙이 실제로 성사되느냐 여부 하나 정도로 압축된다. 게다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 분점정부는 어느 한쪽의 급격한 정책 드라이브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구도인 만큼 증시가 가장 꺼리는 정책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도표 1. 미 중간선거 결과 요약

연도	대통령	정당	임기	하원 (전→후)	하원증감	상원 (전→후)	상원 증감	선거후 정부형태
1930	허버트 후버	공화	1기 2년차	공화 → 민주 (탈환)	-52	공화 유지(1석차)	-8	분점정부
1934	F. 루스벨트	민주	1기 2년차	민주 유지/확대	+9	민주 유지/확대	+9	단점정부
1938	F. 루스벨트	민주	2기 6년차	민주 유지	-72	민주 유지	-7	단점정부
1942	F. 루스벨트	민주	3기 10년차	민주 유지	-45	민주 유지	-9	단점정부
1946	H. 트루먼	민주	승계 (루스벨트 서거)	민주 → 공화	-56	민주 → 공화	-12	분점정부
1950	H. 트루먼	민주	선출후 2년차	민주 유지	-28	민주 유지	-6	단점정부
1954	D. 아이젠하워	공화	1기 2년차	공화 → 민주	-18	공화 → 민주	-1	분점정부
1958	D. 아이젠하워	공화	2기 6년차	민주 확대	-48	민주 확대	-13	분점정부
1962	J. 케네디	민주	1기 2년차	민주 유지	-4	민주 유지/확대	+3	단점정부
1966	L. 존슨	민주	선출후 2년차	민주 유지	-47	민주 유지	-4	단점정부
1970	R. 닉슨	공화	1기 2년차	민주 유지(야당)	-12	민주 유지	+2	분점정부
1974	G. 포드	공화	승계 (워터게이트)	민주 확대	-48	민주 확대	-5	분점정부
1978	J. 카터	민주	1기 2년차	민주 유지	-15	민주 유지	-3	단점정부
1982	R. 레이건	공화	1기 2년차	민주 유지(야당)	-26	공화 유지	+1	분점정부
1986	R. 레이건	공화	2기 6년차	민주 유지	-5	공화 → 민주	-8	분점정부
1990	G.H.W. 부시	공화	1기 2년차	민주 유지	-8	민주 유지	-1	분점정부
1994	B. 클린턴	민주	1기 2년차	민주 → 공화	-54	민주 → 공화	-8	분점정부
1998	B. 클린턴	민주	2기 6년차	민주 유지	+4	공화 유지	0	분점정부
2002	G.W. 부시	공화	1기 2년차	공화 유지/확대	+8	공화 재탈환	+2	단점정부
2006	G.W. 부시	공화	2기 6년차	공화 → 민주	-30	공화 → 민주	-6	분점정부
2010	B. 오바마	민주	1기 2년차	민주 → 공화	-63	민주 유지	-6	분점정부
2014	B. 오바마	민주	2기 6년차	공화 확대	-13	민주 → 공화	-9	분점정부
2018	D. 트럼프	공화	1기 2년차	공화 → 민주	-41	공화 확대	2	분점정부
2022	J. 바이든	민주	1기 2년차	민주 → 공화	-9	민주 유지	1	분점정부

주) 의석 증감은 대통령 소속당 기준의 수치
자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중간선거 해는
4년 중 가장 약한 해,
저점은 선거 6주 전

도표 2. 2026 미 중간선거 Polymarket 배팅 확률: 민주당의 하원 탈환은 베이스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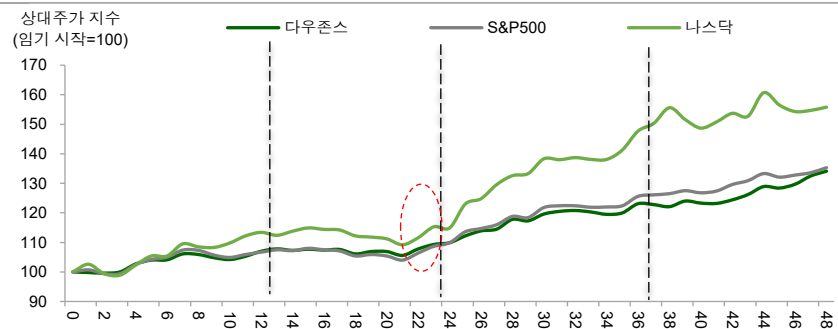
자료 : Polymarket

결국 핵심은
'불확실성 해소' 그 자체

그렇다면 중간선거와 주가는 어떤 관계를 보여왔을까. 중간선거 해는 대통령 4년 사이클 가운데 증시가 가장 부진한 해로 연중 최대 낙폭 역시 이때 가장 깊게 나타난다. 다만 그 저점을 대체로 선거를 약 6주 앞둔 시점(평균 46일 전, 9월 전후)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 저점을 지나 선거 후 6개월까지 S&P500은 평균 +22.7% 반등했고, 24번 중 23번(96%)이 상승으로 마감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증시가 흔들리지만 이후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반등한다'는 통념이 마냥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반등이 선거 결과의 방향과 무관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압승하든, 분점이든 단점이든 상승 패턴은 대체로 성립했다. 시장이 반응하는 대상은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 자체인 셈이다. 이는 월별 수익률에서도 드러난다. 중간선거 해에는 6월(-1.3%)과 9월(-1.5%)에 약세를 보이는 반면, 10월(+2.4%)과 11월(+2.2%)에는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즉 선거를 앞둔 여름에서 초가을까지는 지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10~11월 들어 반등하는 것이다.

도표 3. 대통령 집권연차별 주가지수 평균 경로: 중간선거 연차(2년차)의 계절성 존재



주) 다우존스는 1901-2024, S&P500 지수는 1929-2024, 나스닥은 1973-2024 데이터 기준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패턴이 깨질 땐
언제나 “매크로”

물론 중간선거 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사례도 존재한다. S&P500 지수 데이터가 존재하는 1930년 이후 치러진 24번의 중간선거 가운데 선거 후 +60일 수익률이 -5%를 밑돈 해는 1930년, 1974년, 2018년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은 매크로 악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30년은 대공황 심화와 디플레이션, 은행 연쇄도산이 겹쳤던 시기다. 1974년은 오일쇼크로 촉발된 스태그플레이션 장기 약세장의 막바지였고 2018년은 연준의 양적긴축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급락 국면이었다. 결국 중간선거 특유의 계절성이 무력화되는 조건은 언제나 정치가 아니라 경기, 물가, 전쟁과 같은 매크로 충격이었던 셈이다.

도표 4. 중간선거와 주가지수의 계절성 예외 사례

연도	+60일	+90일	+180일	+1년	선거일 CPI(YoY)	선거일 기준금리	세부 내용
1930	-7.5%	-5.7%	-14.5%	-36.8%	-4.6%	-	-대공황 심화 국면 -1930년 말 은행 연쇄도산과 디플레이션이 겹치며 중간선거 기준 +60일부터 +1년까지 전 구간 붕괴
1974	-5.9%	+3.6%	+18.8%	+18.7%	+12.1%	9.25%	-오일쇼크발 스테그플레이션 장기 약세장의 막바지 -고물가, 고금리, 워터게이트 이슈로의 닉슨 대통령 사임 등의 이슈 존재 -1974년 10월 주가 지수 저점 기록 후 중간선거 기준 +60일까지 주가지수 약세를 보였으나 반등에 성공해 1년 후에는 +18.7% 수익률 기록
2018	-8.1%	-1.1%	+6.9%	+11.7%	+2.5%	2.25%	-연준 양적긴축 및 금리인상과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2018년 12월 연내 최저점 기록 -2019년 1월 연준의 피벗 이후 반등 -중간선거 기준+180일 +6.9%, +1년 +11.7%로 주가 지수 회복

주) S&P500 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중간선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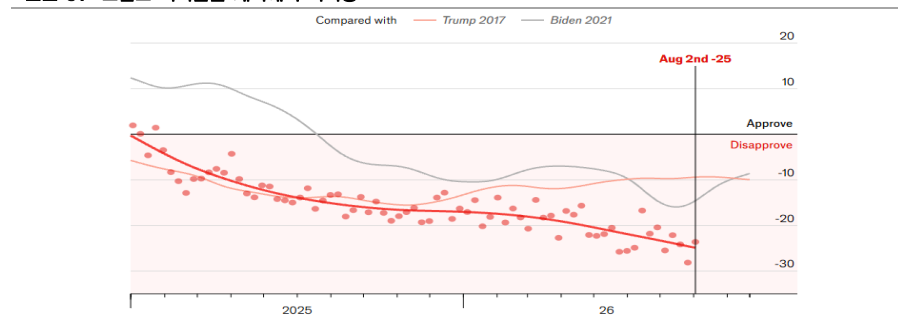
물가 안정화에 대한
빠른 확신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2026년은 어느 쪽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계절성만 믿기에 마냥 편안한 상황은 아니다. 앞서 봤듯 중간선거의 반등 패턴이 깨질 때는 늘 매크로가 문제였는데 하필 지금 미국은 좀처럼 식지 않는 물가와 내려오지 않는 금리, 해결되지 않은 재정적자를 동시에 안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지지율마저 물가 우려로 두 임기를 통틀어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유권자의 최대 불안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생활물가 부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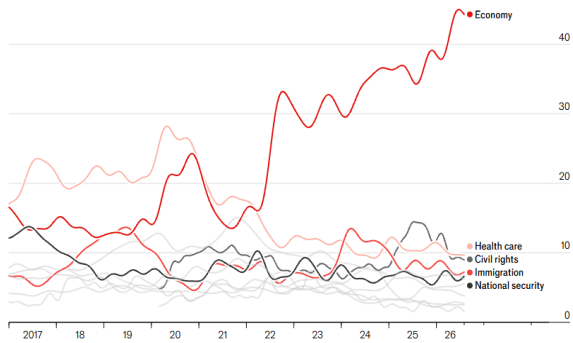
Economist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약 35%에 불과하며 순지지율은 -25%p까지 벌어졌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 반등과 이로 인한 생활물가 부담이다. 실제로 유권자가 꼽은 가장 중요한 사안은 경제로 그 비중이 44%에 달해 의료, 시민권, 이민, 안보 등 여타 모든 이슈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바로 이 경제 이슈야 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표가 가장 나쁜 분야라는 데 있다. 항목별 순지지율을 보면 물가가 -40%p로 최악이고 이어 외교, 일자리 및 경제 순으로 모두 취임 직후와 비교해 평가가 큰 폭으로 악화됐다. 그나마 이민과 범죄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이슈이나 유권자들의 관심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항목이다.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수록 여당의 중간선거 의석 상실 폭은 더 컸다. 게다가 공화당이 가장 취약한 '살림살이' 이슈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만큼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인 셈이다.

도표 5. 트럼프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중



자료 : Econom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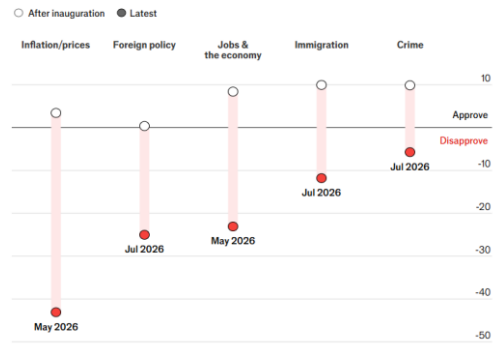
도표 6. 유권자의 관심사: 과거 대비로도 경제(44%)가 압도적



자료 : Economist

금리가 안 내려온다:
연준은 아직 멈춰있는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반등 중

도표 7. 여전히 트럼프가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자료 : Economist

다만 이 물가 문제의 무게는 선거판에만 그치지 않는다. 유권자의 살림살이를 짓누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시장에서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3.75%로 연초 이후 동결 상태지만 같은 기간 2년물 국채금리는 3.47%에서 4.19%로, 10년물은 4.19%에서 4.60%로 상승했다. 이는 채권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을 한발 앞서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장기물인 10년물과 30년물은 단순한 물가 우려를 넘어 향후 재정적자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계심까지 있어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 기조가 그대로인데도 커브 전반이 밀려 올라가는 이 국면이 장기화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성장주와 지수 전반에 구조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담을 되돌릴 요인들도 존재하는 만큼 시장 금리의 상승을 곧바로 증시 추세 전환 시그널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당장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로서는 물가 지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제유가를 추가로 자극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유가 상단도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끈적한 물가를 아래로 눌러줄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8월 27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의 위시 의장의 발언을 통해 통화정책 향방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중간선거 특유의 계절성까지 더하면 지금의 부담이 예상보다 이르게 해소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도표 8. 금리 인상 우려를 반영하는 단기금리,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확대를 경계하는 중장기 금리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증시가 봐야 할 것은 사실 선거보다 금리

중간 선거 결과는
이미 선반영,
게다가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통상정책은
행정부의 몫

결론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선거 결과 자체의 서프라이즈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예측시장 및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원은 민주당의 승리, 상원은 공화당의 석권 혹은 민주당의 승리가 기본 시나리오기 때문에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집권의 실패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게다가 한국이 노출된 미국발 변수의 핵심인 관세 및 대중 정책 등은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 영역에서 결정되므로 상·하원 구성이 바뀌어도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여전히 본질은 공급망
내 중국 배제 및
우방국 중심의 재편

그런데 최근 미 행정부의 방향은 '무차별적 보호무역'이 아니라 특정 비우호국, 특히 중국을 정조준한 선별적 견제에 가까운 상황이다. 품목별 관세 부과 여부를 가리는 Section 232 조사나, 데이터센터용 중국산 부품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법안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다시 말해 이들 조치의 본질적 목표는 전방위적 관세 장벽이 아니라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그 빈자리를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이 기조가 유지되는 한 한국은 오히려 재편의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대중 견제 수준을
단기간 내 완화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한국이 받는 실제 압박은 '관세 폭탄'이 아니라 향후에도 '미국 본토 투자 확대 요구'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는 이미 대규모 대미 팸 투자라는 형태로 반도체에서 확인된 바 있다. 2025년에 우려됐던 한국산 전반에 대한 대규모 관세 시나리오조차도 이제는 IEPA 기반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첨단 IT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 로컬 업체 부상 가능성을 견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의 미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 하에서 국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반사 수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금리 상승의 뿌리인
재정적자,
추가 악화 여부가 관건

결국 남은 하반기 동안 한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변수는 미국의 금리 환경이다. 그리고 그 금리의 향방을 중장기적으로 좌우할 근본 변수는 바로 재정적자가 될 것이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관세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전체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애초에 크지 않은 데다 최근에는 환급까지 진행되며 오히려 소폭이나마 적자 폭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베넷 재무장관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뚜렷한 개선세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기금리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온 만큼 관건은 여기서 추가로 적자폭이 확대되는지의 여부다. 향후 재정 건전화의 진전 속도와 그에 따른 장기금리의 방향성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

정리하면, 이번 중간선거 자체는 한국 증시의 방향을 가르는 결정적 이벤트는 아니겠으나 그 결과가 규정할 이후의 정책 및 금리 환경에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첫째, 대중 경제 중심의 통상정책 기조가 유지되며 한국이 '수혜국'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다. 둘째,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가 실제로 진전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장기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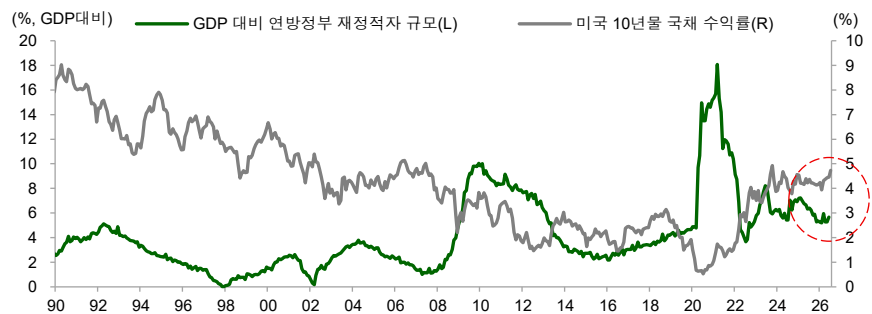
도표 9. Section 232(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현황

진행 상태	품목	조사 개시일	완료 예정일 (개시+270일 기준)	세부 내용
관세 부과	구리 (Copper)	2025-03-10	2025-12-05	50% 관세 2025-08-01 발효
	목재·제재목 및 파생품 (Timber/Lumber)	2025-03-10	2025-12-05	10%-25% 관세 2025-10-14 발효
	의약품·원료의약품 (Pharmaceuticals/API)	2025-04-01	2025-12-27	특허/브랜드 의약품 최대 100%, 2026-07-31 발효(단계적 적용 예정) 온쇼어링 협약 시 감면
	중·대형 트럭·부품·버스 (Trucks/Buses)	2025-04-22	2026-01-17	25% 관세 2025-11-01 발효
	폴리실리콘 및 파생품 (Polysilicon)	2025-07-01	2026-03-28	15% 관세 2026-12-04 발효 예정
일부 관세 부과	반도체·제조장비 (Semiconductors)	2025-04-01	2025-12-27	특정 첨단 반도체에 25% (2026년 초) 부과 예정이었으나 국가 및 기업별 협상을 병행하며 조율
관세 미부과	가공 핵심광물 (Processed Critical Minerals)	2025-04-22	2026-01-17	2026년 1월 무역협상 지시로 전환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 (Aircraft/Jet Engines)	2025-05-01	2026-01-26	2026년 7월 조사 종료 및 무역협상으로 전환
조사 진행 중	무인항공기 (드론, UAS)	2025-07-01	2026-03-28	의견수렴 완료, 결과 대기
	풍력터빈 (Wind Turbines)	2025-08-13	2026-05-10	조사 진행 중
	로봇·산업기계 (Robotics & Industrial Machinery)	2025-09-02	2026-05-30	공개의견 접수 단계
	개인보호장비·의료기기 (PPE & Medical Equipment)	2025-09-02	2026-05-30	조사 진행 중
	무연탄 (Anthracite Coal)	2026-06-29	2027-03-26	조사 초기 단계, 공개의견 수렴 진행

주) Section 232의 최장 법정 조사기간은 270일이나 실제 관세부과 관련 세부내용 발표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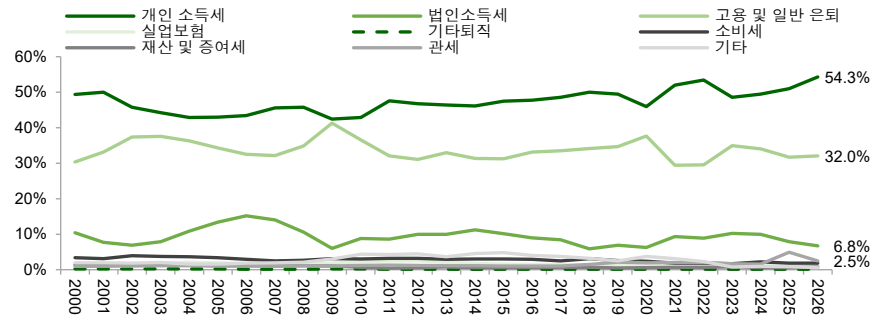
자료: BIS,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도표 10. 미국은 재정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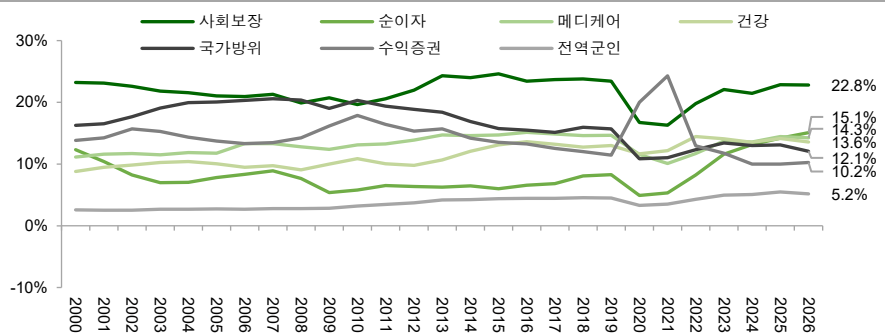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항목별 미 정부 세입 비중 추이: 2026년 기준 관세는 전체의 2.5%에 불과



주) 2026년은 1월~6월 합산 기준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항목별 미 정부 세출 비중 추이: 사회보장>순이자>메디케어>건강보험>국방위



주) 2026년은 1월~6월 합산 기준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8/3 미 7월 ISM 제조업 PMI PLTR S-Oil	8/4 미 6월 JOLTS 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 AMD, ANET, SPCX, CAT, MRTK, AMGN, PFE, GILD, MCD 삼성증권, 카카오페이, 강원랜드	8/5 미 재무부 3분기 QRA 미 7월 ADP 고용변화 미 7월 ISM 서비스업 PMI WDC, SNDK, UBER, APP, LLY, DIS, DASH DB하이텍, 롯데칠성, 현대백화점, 에이피알	8/6 COP, HEWM, DDOG, CEG, ABNB 카카오, CJ ENM, 휴젤, LG유플러스, 케이티엔지	8/7 미 7월 고용보고서 미 7월 실업률 VST 네이버, CJ CGV,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파마리서치
8/10 RKLB SK바이오사이언스	8/11 LITE, CRWV, SMC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펄어비스, 신세계	8/12 미 7월 CPI 한 7월 실업률 NBIS 한국콜마, 더블유게임즈 미래에셋증권, 한화생명	8/13 한 옵션 만기일 미 7월 PPI AMT, TPR LG, 달바글로벌, 삼성화재, 삼성생명, DB손해보험	8/14 미 7월 소매판매 메리츠금융지주, 현대해상, 코리안리
8/17	8/18 미 7월 산업생산 HD	8/19 TJX, LOW, TGT, EL	8/20 7월 FOMC 의사록 공개 MRVL, WMT, DE, DLTR	8/21 미 옵션 만기일
8/24 PANW	8/25 미 7월 CB 소비자신뢰지수 INTU	8/26 미 7월 PCE 미 2분기 GDP(잠정치) NVDA	8/27 잭슨홀미팅(~29일) 한국은행 금통위 ULTA, LULU, DG	8/28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미 8월 미시간 소비자심리지수 미 8월 미시간 기대인플레이션
8/3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한 7월 산업생산 한 7월 소매판매 PDD	9/1 한 8월 수출입동향	9/2 CRWD, CRM	9/3 AVGO, DELL	9/4

주) 기업 실적 발표일은 추후 변동 가능, 각국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